

홍남기 “카드쓰면 최대 20만원 캐시백… 사용처 확대할 것”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내달부터 두달간, 1인당 월 10만원
4~6월 평균 사용액의 초과액 계산
중소 대출만기 내년 3월까지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0월부터 11월까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이 시행된다. 1인당 한도 월 10만원, 두 달 간 최대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 지원 사용처도 ‘배달앱’ 등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민 편의, 방

역 조화 등을 고려해 10월 소비분부터 캐시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상생 소비지원금인 카드 캐시백은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3% 넘게 더 사용하면, 더 쓴 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이다. 10~11월 두 달 간 시행되고 1인당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

다. 정부는 관련 예산 7000억원을 확보했다. 카드 캐시백 비대면 사용처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재확산 상황에도 소비를 살리기 위해 배달앱, 기업형슈퍼마켓 등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며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도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기금, 소

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채무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이나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 구제해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상환 가능 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대·중소 협력 ‘나노융합 얼라이언스’ 발족 항공·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산업부, 5년간 1243억 투자

나노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수요처인 현대차 등 대기업이 협업하는 ‘나노융합 얼라이언스’가 발족했다. 정부는 급격히 커지는 나노기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제품 개발에 5년간 1243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빅3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나노산업 성장 발전을 위해 나노 소재·부품의 개발과 공급을 촉진하는 ‘나노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에는 나노 소재·부품 제조사인 아모그린텍, 네패스, 제이오 등 중소기업 30여곳과 수요처인 현대차, LG전자, 삼성SDI 등 대기업 20여개사, 총 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기업은 기술자문과 실증 테스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나노 소재·부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양질의 제품을 공급해 대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

나노 소재·부품은 그 특성상 수요가 특정되고 보통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대기업이 구매하는 시장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다.

이 때문에 나노 소재·부품 중소기업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양산을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다.

IndustryARC에 따르면 세계 나노 기술시장은 2020년 623억달러에서 2025년 1218억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제품 적용 비율은 전자가 46%로 가장 높고, 헬스케어/의약(26%), 에너지(19%), 환경(7%), 자동차(8%) 등의 순이다. 나노융합 얼라이언스는 이러한 나노 소재·부품의 세계시장 전망을 고려해 미래차, 전자부품, 에너지, 바이오헬스, 환경 등 5대 분야를 주요산업으로 선정, 각 분야별 워킹그룹을 설치해 운영한다.

각 워킹그룹은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며, 나노 소재·부품의 수요 발굴, 공동 기획연구 등을 수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고용부, 15개 특고업종 대상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큰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등 지원을 받게 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2021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270일에 30일을 더해 올해 최대 30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개 업종은 항공기취급업과 여행업을 포함, 조선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부당하고 편중 노동자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본부 노동자들. /뉴시스

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한 뒤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곳, 근로자 29만5000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사업자 7만2000곳, 근로자 77만여명이 2조2779억원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도 관광업 관련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용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원금 상환도 더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에 2022년 신용보증부 특별용자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부 특별용자는 담보 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초 관광기금 용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에는 원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한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호텔업 등급평가는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호스텔업을 제외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호텔업 등급평가가 미뤄졌고, 이번에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호텔은 등급평가 전까지 기존 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추석연휴 전 일주일간 ‘교통사고 주의’

경찰청, 가장 취약한 시간 ‘저녁 6시’

추석연휴 직전 일주일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저녁 퇴근 시간을 전후해 퇴근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 일주일간 한 해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기간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추석 연휴 기간 중 1만35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만369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연휴기간 직전에 교통사고가 집중됐는데, 특히 작년 추석

연휴 직전 일주일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한 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전날로, 퇴근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는 18시 전후가 가장 취약한 시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연휴 사고는 사상자가 많고, 특히 어린이·뒷자석 사상자 비율이 증가해 동승 중인 자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단위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기간 사고 1건당 사상자는 1.8명으로 평소(1.5명) 대비 16.5% 높았다.

사상자 비율은 평소보다 어린이가 1.4배, 뒷자석은 1.3배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헬스장 내부에 요금·환불기준 공개 의무화

공정위, 관련 개정안 마련 행정예고

앞으로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내부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환불 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전통 키편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해 등록 상담을 받아야만 등

록신청서를 통해 비용을 알 수 있어 폐쇄적인 정보제공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 이전에도 서비스 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측정불응’,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